



## 고령사회 도래와 미래 준비에 대한 단상

**김근홍** | 한국노년학회 회장  
강남대학교 교수

### 1. 들어가며

동물의 행태를 연구하는 분야에서 ‘로드킬’에 대한 설명 중 기억나는 게 있다. 최고 수준의 민첩성을 자랑하는 고양이의 경우 먼발치의 불빛을 본 순간 몸을 날려 피하면 죽음을 피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고양이는 영점 몇 초가량 맞서 싸울지 아니면 도망갈지 생각하다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다. 축구에서 ‘닥공’이라는 말이 회자된 적도 있다. ‘입 닥치고 무조건 공격한다’는 말인 듯한데, 지향성 전시 효과를 극대화한 듯하다. 정책에도 그런 식의 것들이 있다. 이를테면 고령사회 원인의 한 축을 이루는 ‘저출산’ 문제 해결

을 위해 해마다 수십조 원의 예산을 들여 왔지만, 과연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이런 물음에 대해 ‘닥공 정책’에서 몇 수 위인 ‘4대강 사업’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드는 대답이 있다. 정책 효과란 게 그리 쉽게, 단기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다. 문제는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언제 효과가 나타날지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을 그렇게 순식간에 닥공식으로 해치워야 하느냐는 것이다.

제목에서 보듯이 고령사회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다. 내년이나 도래하리라던 통계청의 예상과 달리 2017년은 이미 고령사회의 원년이 되었기 때문이다(최희석, 2017; 이유중, 2017).<sup>1)</sup> 그래서 다급하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려 도

1)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에서 9월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3.8%로 아직 14%에 이르지 않았지만 도표에서는 14%로 잡았다.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인용한 동아일보는 9월 4일 고령화율 14.2%를 넘어섰다고 발표하였다.

망치거나 아니면 닥공식으로 밀어붙여도 시원찮을지 모를 지경이다. 그러나 어디로 몸을 날릴지도 모르는 채, 어떤 효과를 낼지도 모르는 채 무모하게 달려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부족함을 채우기엔 모자라지만 급한 대로 돌아갈 것들은 돌아가고 있다. 이미 도래한 고령사회지만 앞으로 고령화가 심각해질 미래를 생각하며 좀 더 짜임새 있는 정책들을 준비해야 한다.

## 2. 유기적인 정책의 필요성

짜임새 있는 준비를 위해서는 유기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의 상황과 원인, 현재의 추세로 미루어 닥쳐올 미래 사회의 모습에 대해 다각적으로 생각해야만 한다. 사회 고령화처럼 가까운 시일에 완화할 수는 있으나 멈추거나 해소할 수는 없는 문제들로는 인구 증가와 에너지 고갈, 생태계 파괴, 공동체 해체와 지역적 불평등 강화, 빈부 격차의 극단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 변화의 가속화 등이 우선 떠오른다. 어느 것 하나 따로 분리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저 모든 문제를 한 가닥으로 통합한다면 그것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아니라 얽히고설켜 도저히 풀 길 없는 실타래처럼 되고 만다. 그렇게 되면 ‘로드킬’과 현상은 다를지라도 속성은 같은, 다른 식의 파국을 맞을지도 모른다.

현실적으로 문제 영역마다 전문가들이 있고

영역별로 나름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마련이다. 이번 호에 실린 글들은 보건사회, 노인복지, 노동, 법제 분야에서 사회 고령화 문제를 진단하였다. 영역별 심화 탐구도 중요하지만 같은 문제에 대한 연계 분야의 접근 방법을 함께 놓고 보는 것은 유기적인 접근 방법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리고 정책에서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다양한 영역의 노력을 유기적으로 모으고 통합하는 역할이 꼭 필요하다. 그러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수자원 정책처럼 물 관리라는 한 가지 영역을 여러 부서에서 제각기 맡아 비효율을 키울 수 있다. 분업이란 유기적인 틀, 질서 안에서 유기적으로 분할된 업무들로 전문화될 때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 유기적인 틀이나 방향타 없는 분업은 비리와 비효율의 온상이 되기 쉽다.

특별한 정책적 변화가 없을 경우 미래에 맞게 될 현실의 모습을 상상해 보자. 고갈된 자원을 대체할 것들이 개발되긴 하겠지만 충분한 정도가 되지 못하여 제반 생필품의 가격은 무척이나 오를 것이다. 기술혁명으로 첨단 실버 상품들도 쏟아져 나올 것이다. 다만 그 상품들을 쓸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제한적이어서 생산은 대량생산이 아니라 주문형에 가깝다. 노인들 중에서 부를 모은 일부만이 쾌적한 환경에서 첨단 상품들과 인공지능 서비스를 누리며 향락과 오락으로 시간가는 줄 모른다. 반면 대부분의 노인들은 늘어날 일 없는 기초연금으로 오염된 환경에서 ‘첨단’이긴 하지만 저가 보급형 상품이나 철 지난 중고 상

품들을 쓰며 천편일률적인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찾거나 그도 귀찮으면 골목이나 어두컴컴한 방에서 절전형 TV로 방송이나 보며 남은 시간을 보내느라 애쓸 것이다.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이나 다문화 구성원, 소수자들의 생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도층에서 여성의 비중이 다소 커지긴 했지만 근본적인 변화와는 거리가 멀다. 골목이나 공터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지나가는 행인들일 뿐 함께 어울리는 경우는 좀체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아이들이 노는 소리,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대도시에서 먼 지역에는 골목마다 폐가들이 즐비하고, 집이 무너져도 바로 옆집 말고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 다만 떠날 수 있는 사람들만 떠날 뿐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욕을 받고, 일부만 품위를 누린다. 이는 디스토피아 영화나 소설에서 흔하게 보일 법한 장면들이다. 그리고 이를 좀 더 극단화하면 좀비 영화가 된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좀비처럼 살아가는 다수, 그러다가 극에 달하면 좀비들이 달려드는데, 그 숫자 때문에 죽지도 않는 것처럼 보인다.

반대로 유기적인 정책 영역과 분야별로 전문적인 접근 방법 모색을 통해 유토피아에 가까워진 미래 사회의 모습은 어떨까? 자원 고갈에 대비해 과소비 대신 절제하는 소비가 자리 잡은 덕에 물가가 오르긴 했지만 사람들의 생활에는 불편함이 없어 보인다. 그 덕에 생태계도 안정을 찾고 지구온난화 문제가 해소되는 중이며 사람들

은 건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윤리적인 먹을거리를 누린다. 생산은 대량생산 체제를 벗어나 필요한 만큼 에너지와 원료 효율성을 최대화한 공정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가 대부분이지만, 그 밖의 영역에서는 자동화보다 사람들의 노동을 사용하여 실업자가 별로 없다. 제도적으로 실업자가 생겨도 복지제도로 보충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다. 불편한 점들이 생길 때도 있지만 누구나 다 같은 처지이기에 불만 없이 감내한다. 첨단 상품이 간간히 나오지만 대체로 저렴하여 거의 모두 사용할 수 있고, 간혹 고가의 최첨단 제품들은 마을 단위로 구매하여 필요한 사람들이 빌려 쓴다. 노인과 환자처럼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외출을 한다. 혹시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도 누가 누군지, 어떤 상황인지 다 아는 공동체 분위기라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골목마다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리고, 우는 아이를 달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더구나 아이들의 생김새며 피부색도 다양하다. 아무리 외지라도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는 곳은 드물고, 인구 감소로 마을이 빌 경우 더 큰 단위 공동체에서 참여하여 이웃 공동체와 합치거나, 다른 용도로 개발할 경우 더 큰 단위 공동체와 협력한다. 제도로 모욕을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다른 사람들의 수고로 혼자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도 별로 없다. 공산주의라고 따지고 들지도 모를 상상이겠다. 그러나 이테올로지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공동체 복원과 빈부

격차 완화, 환경과 자원을 의식하는 소비 등을 모으면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다.

### 3. 의식과 문화 차원의 준비

정책이 세워지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가 함께 움직여야만 한다. 현재의 사회 구조와 제도는 대부분이 1960~1990년대에 뿌리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최대의 과제가 성장 이었고, 그 목적은 상당한 수준으로 달성되었다. 그 덕에 오늘날 이 정도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다. 그것은 모두 우리 세대를 포함한 위 세대의 공이요 덕이다. 그런데 약도 애초에 독인지라 독성분 없이 득만 되는 약이란 있을 수 없고 그늘 없이 빛만 있을 수도 없듯이 빈부 격차, 소수자 차별, 여성 차별, 세대 간의 반목과 경쟁, 공동체 위기 등의 내적인 문제들과 자원, 환경, 기후 등의 보편적인 문제들을 맞았다. 그 해결은 우리 세대를 포함하여 아래 세대에서 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 세대의 변화가 마중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라온 환경과 문화에서 빚어진 의식과 태도를 바꾸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그래서 아직도 노인들에 대한 처우 문제와 양성평등, 소수자 차별 등의 문제가 다르다는 생각이 강하다. 사회 고령화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해야 하지만 그 해결과, 여성, 동성애자나 외국인 노동자, 이민자 등의 소수자와 관련한 문제가 같은 궤로 묶여서는 안 된다는 식이다. 그

러나 노인이 사회 주도층이 아니라면, 즉 고령사회에서 노인이 사회문제화된다면 노인 세대 역시 소수자의 입장과 다를 바 없다. 이는 현재의 주도층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회를 갈라 소수자를 만드는 것을 진리로 포장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사회 질서 유지 또는 통치의 편의 때문이다. 모욕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는 고령사회로 인한 생산 또는 경제 문제의 일부 정도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몰라도 노후의 삶의 질이나 노인들의 행복이 나아지는 어렵다. 행복하지 않은 공동체, 껍데기조차 균열이 가는 공동체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 4. 고령화가 심화될 미래를 위한 복지와 노년학 분야의 준비

앞에서 본 문제의 맥락을 바탕으로 고령사회의 문제점 해결 모색과 특히 그 사회에서의 노인 복지와 관련한 준비 역시 통합과 분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왜냐하면 이 분과 영역 안에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세분화된 영역이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노후의 소득 문제는 사회의 양극화 문제, 연금 문제, 일자리 문제(양적, 질적), 건강 문제 등과 이어진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풍요를 일군 우리의 위 세대, 즉 현재의 노인들 중 빈곤에 시달리는 비율로만 보면 제법 산다는 나라들 가운데 가장 뒤떨어진다. 전

세계에서 비슷한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성장을 이룩했는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빈곤에 시달려야 한다면 그것도 이상하다. 결국 노동과 분배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가 바뀌어야 하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제도 변화를 이끌어낼 정도의 연대가 필요한데 그런 예를 우리는 북유럽의 스웨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노동조합(LO)에서 20년간 연대소득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고소득자들이 당장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저소득 노동자들의 임금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 덕에 스웨덴은 복지와 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10%는 전체 토지의 66%를 차지하였고, 하위 50%가 보유한 토지는 0.7%(피케티지수 8.28로 세계 1위)다(허지은, 2017에서 재인용). 그럼에도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은 아주 미미하여 부동산을 차지한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노동으로 정해진 세금 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보다 늘 더 많은 부를 이루게 된다. 흙수저로 태어나 금수저가 된다는 게 불가능해지는 이유다. 게다가 노동 소득조차도 상위 소득자와 하위 소득자, 원청과 하청 사이의 격차가 자꾸만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 소득을 보장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노인들이 더 오래 일하면 그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거리가 있어 노후 생활 리듬에도 좋고 사회 생산성에도 보탬이 될 테니

말이다. 그러다 보니 이는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조정의 논거가 된다. 맞고 틀림을 따지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한다. 그 내용은 더 일하실 생각은 있는지, 일할 만한 건강 상태인지, 일할 조건은 어떠한지, 또 노인들의 일자리가 다른 세대의 일자리와 상충하지는 않는지, 적어도 상충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오해를 풀어 줄 길은 있는지, 그리고 그 노동활동이 전체 노동의 가치를 더 떨어트리기보다 더 높이는 쪽으로 갈 수 있는지 등이다.

치매를 포함한 건강 문제와 노후 돌봄의 문제 역시 복합적이다. 기왕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듯이 예방이 보건, 의료, 건강은 물론 심지어 경제 정책 면에서도 득이 된다면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예방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 독일을 비롯한 서양에서는 시설 위주의 정책을 자신 있게 떠다가 곧 재가 우선 정책으로 돌아선 지 오래되었다. 우리의 경우 아파트 문화가 주류가 되고 나서부터는 보살핌 문제는 시설 위주로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 그런 와중에 기준 미비에 이은 현실적 여건 또는 행정 편의 등에 힘입어 인권 문제를 야기할 지경의 시설들이 버젓이 시설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구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재정 문제 등으로 재가 우선 원칙을 내세운 상황이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노후에 소득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일찍부터 건강 문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을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과제가 되었다.

## 5. 나가며

그럼에도 우리는 노후 보살핌의 방법과 품성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한다. 복지의 의미와 혜택, 예방 대책의 효율성, 재가 돌봄과 시설 돌봄의 문제 해결과 더 바람직한 돌봄, 미래의 변화와 그에 대한 준비 등에 대해 말이다. 한편으로는 모순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길이기도 하다. 문제는 알지만 사회가 단숨에 바뀌기 어렵다는 것은 그간 겪으며 배워 왔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가 바뀌기 위해서는 의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의식과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맡은 일을 다하되 앞에서 살펴본 전체 그림과 맥락을 짚어 보는 일도 함께 해야 한다. 당장 소외당하고 힘들어하는 노인 한 분을 도와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해줄 방법을 찾는다면 그것은 이미 작은 혁명의 시작이라고 보아도 좋다. 구조적·제도적으로 노인들의 건강과 여가를 비롯한 전체 삶의 질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내고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커다란 혁명이다.

그러는 한편 우리는 정책자들의 지향점과 태도를 눈여겨보며 정치로 세상을 바꿔가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전통을 만든 2017년을 생각하면 그런 일도 아예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일단 얼마나 약속을 지키고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지 지켜보며,

응원할 일은 응원하고 비판할 일은 비판하며 우리 세상의 살림에 우리 스스로 함께 참여한다면 아마도 위에서 언급한 디스토피아와의 거리를 그만큼 더 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 참고문헌

- 이유중. (2017). **한국 고령사회 진입...65세 이상 14%**.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East/MainNews/3/all/20170904/86148563/1/>에서 2017. 9. 4. 인출.
- 최희석. (2017).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고령사회 첫 진입**.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no=590394&year=2017/2017.09.03>에서 인출
- 허지은. (2017). **세계 최고 수준 '불평등 사회' 바꿀 수 있을까**. 이코노믹리뷰.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154>에서 2017. 10. 28. 인출.